

아이 낳고 싶어도...돈 때문에 포기하는 난임부부들

광주지역 난임 환자 4810명
시술비 1회당 수백만원 불구
정부 지원 1회당 50만원 불과
17회 초과하면 본인인 부담
추가 지원 민원...市 대책 주목

#1. 결혼 4년차 장민아(여·34·가명·광주시 북구)씨는 2년전부터 난임치료 병원에 다니고 있다. 아이를 좋아한 그녀지만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기만 하다.

장씨는 "2년째 이어진 난임 시술이 육체는 물론 정신, 그리고 가정 경제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긴 하지만 시술에 약값, 검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든다.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비용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투면서 사이도 멀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 김민영(여·37·가명·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해 난소 채취가 어려운 '난소기능저하'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정부 지원은 난소를 채취만 해도 차감하는 시스템이어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시술 횟수를 초과한지 오래"라면서 "시술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롭다.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한 사람도 많다"며 울

먹었다.

광주지역 난임 환자 수천명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정책 화두로 삼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환자들 사이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난임은 부부관계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까지 유발해 부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난임시술현황에 따르면 올 한해 상반기 기준 광주지역 난임 환자는 4810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3만3576명, 경기 1만8946명 대구 8155명, 부산 7416명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의료계와 난임환자 등에 따르면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100만원, 체외수정으로 수정란을 만들어 자궁에 이식하는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150만~3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각종 검사와 약값 등을 포함해 몇 차례의 시술에 나설 경우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게 난임환자들의 설명이다. 시술비는 1

회당 평균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회 기준 1회당 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2인가구 기준 월 소득 523만2000원 이하)이하를 대상으로 시험관 시술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은 5회 등 총 17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나마 회당 최대 50만원씩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도 정해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인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과 전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건강보험 횟수 소진

자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전남 자치단체 중 완도군은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에게 1회당 50만원씩 3회 지원, 함평군은 1인당 3회까지 최대 200만원, 순천시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최대 2회에 걸쳐 신선배아 최대 2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에선 북구만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엔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남아 국고에 반납까지 했다.

결국 참다 못한 난임환자들이 최근 광주

시 민원코너엔 '난임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용섭 시장은 이례적으로 "(광주에서)돈이 없어 애를 못넣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당 민원에 직접 답변했다. 하지만 결국 추가 예산이 불가피한 사업인 탓에, 광주시의 난임환자 지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늘 난임환자 지원 민원을 토대로 광주시민소통관 주재 회의의를 가졌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등의 등을 거친 뒤 난임부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돈봉투 발단 머리채 싸움 곡성군 의원들 소환 조사

곡성군의회 의원실에서 돈 봉투 사건을 발단으로 서로의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군의원들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곡성경찰은 9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을남 군의원을 지난해에 불려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에 무소속 유남숙 군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과 유 의원의 다툼 배경으로 짚는 2014년 돈 봉투 사건의 사실관계와 각종 의혹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해 25일 낮 12시 20~30분 사이 곡성군의회 2층 유 의원 사무실에서 육살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4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 책상에 돈 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유 의원에게 불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조례 위반이 인정된다"며 두 의원에게 출석징치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법원 "공무로 생긴 병에 기존 질병 악화...공무상 재해"

기준에 맞지 않았던 질병이 공무로 생긴 다른 병 등의 영향으로 악화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2016년 말기신장병을 진단받은 A씨는 2017년 정년퇴직을 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1990년대부터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급성 심근경색만 승인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공단은 그의 말기신장병 발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앞서 승인된 급성 심근경색의 치료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은 물론 신장 기능도 저하됐고, 계속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기신장병에 이른 것이라며 소

송을 냈다.

법원은 이러한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로 생긴 질병 등 때문에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 때문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기신장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실텐트서 추위 피하세요" 9일 광주 북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NC백화점 앞 버스승강장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온실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26곳에 온실텐트를 설치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역단체 출자출연기관

연차수당 부정지급

호남 지역 5곳 적발

연차수당을 부정지급한 호남지역 출자·출연기관 5곳이 적발됐다.

9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4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모두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20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했고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전남·북지역 출자출연기관 5곳에서도 연차수당 부당 지급과 연차수당 문제 등 총 22건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근로 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민원인 여성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가벼운 견책 처분만

전북경찰청은 9일 민원인 여성에게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일으킨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A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강제 수사도 고려했으나,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신분상 처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박기성 기자 parkks@

"가수 김건모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검찰에 고소장 제출

○-가수 김건모(5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이날 A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하러 온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혹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는데, 김건모 소속사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